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도 개발 대상이 된다. 지방 자치 단체가 열악한 재정을 탓하며, 매입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이 이제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 온 토지 소유주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 누구나 찾았던 도시공원이 어떻게 바뀔지, 시민의 불안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언제나 그래 왔듯 정부는 예산을 들여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더 좋게 조성하는 것보다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민간, 즉 건설업체가 최대 면적의 30%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고, 그 수익 중 일부로 나머지 지역을 공원으로 보존 및 조성하기로 했다. 물론 이 제도는 실시 과정에서 광주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개발을

도시공원과 광주다운 도시 만들기

전제로 한 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가 미흡한 데다, 도시공원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주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로지 국가 예산의 투입 없이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봉책을 찾아 나선 것으로, 언제든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둘러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는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그것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사실 지금도 늦은 것만은 아니다. 중앙 정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이 합쳐지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일몰제가 토지 소유주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국공유지는 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유지의 경우 공원에서 해제되어도 수목의 밀도나 경사도, 경관적인 특성 등과 같은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 최소한의 개발 기

준을 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도시 내 산림소유주들에 대한 세금 감면과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민 참여형 도시 숲 조성 관리 방안 마련 등과 같이 도시 숲을 보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사라지는 도시공원 면적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공원을 도시 내에 만드는 노력이 국가·지자체·기업 차원에서 이어졌으면 한다.

세계적인 도시들을 보면 그 중심에는 대규모 도심 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공원 센트럴파크는 800에이커 규모의 공원이 맨해튼의 마천루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뉴욕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이자 도시 생활을 풍성하게 해 주는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공원이 단지 녹색의 치장이 아니라 도시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도시 시설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도시의 중앙을 공원으로 할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공원은 한때 정부에서 공원을 상업지구로 만들 계획을 세웠으나 시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혀 공원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들이 해마다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여 공원의 관리 운영 유지비로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의 스탠리 공원은 대규모 도시 숲을 도시의 자원으로 생각하는 시민 의식이 만들어 낸 공원으로 가능한 한 도시 숲을 보존하고 시민단체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대규모 공원이 도심 한가운데 존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병원·학교·상가 활성화로 인해 도심 경제가 촉진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주다운 도시' 과연 광주다운이란 무엇인가? 지불 가치가 있는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바로 이런 도시가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거창한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 즐거워서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명소화 될 수 있는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공원이 단지 녹색의 치장이 아니라 도시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도시 시설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도시의 중앙을 공원으로 할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공원은 한때 정부에서 공원을 상업지구로 만들 계획을 세웠으나 시민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부딪혀 공원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들이 해마다 자발적으로

법조칼럼



김성진 변호사

최근 핀란드의 감옥 제도에 관해 고찰한 박사 학위 논문 한편을 접했다. 논문의 저자인 김형주는 '인도주의적 감옥 제도의 형성'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핀란드 감옥의 구금 방식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은 구금을 지양하고 응보(應報)보다 예방을,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북유럽 국가 중 특히 핀란드는 현재 죄수를 구금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과거에는 혹독한 형태로 죄수를 구금하다가 단기간 내에 북유럽식으로 탈바꿈하였다가 특징이 있다.

이 중 핀란드식 구금 중 일부인 소위 '열린' 감옥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사는 성범죄나 음주 운전 등의 경우 그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취지의 불만이 늘고 있다.

북유럽 국가와 핀란드의 '열린' 감옥

죄를 범한 자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 같은 범죄가 재발하거나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범죄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딘 자를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할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숙제다.

이 같은 점에서 핀란드의 감옥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의 '감옥'을 깊이 이해하고, '구금'이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문에 따르면 핀란드의 '인도주의적' 구금 형태의 특징은 중간 처우 시설인 '개방형 감옥'에서 두드러진다. 죄수는 일반 주택과 비슷한 외관의 숙소에서, 사복을 입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 노동하고 교육을 받는다.

죄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한다. 죄수는 제한적이지만 인터넷과 휴대전화,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유 시간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고 때때로 견학이나 소풍을 가기도 한다. 이들은 2개월마다 3일간의 휴가를 갖는다. 이 같은 핀란드의 개방형 감옥은 마치 규율이 엄격한 '기숙형 취업 학원'처럼 기능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핀란드의 죄수 중 66%가 우리나라

의 감옥과 유사한 폐쇄형 감옥에, 34%가 개방형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구금은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다. 구금은 죄수를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특정 장소에 일정 기간 격리하는 식으로 자유 박탈을 집행한다.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응보에 중점을 둔다면 그에게 열등한 처우를 주는 방식으로 그의 참회와 반성을 유도한다.

반면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재사회와 혹은 사회 복귀를 강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과 노동을 통해 순종적인 시민을 생산하고자 한다. 핀란드의 개방형 감옥은 '예방'과 재발률의 저하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형벌로 죄인의 신체에 고통을 부과하는 신체형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이를 지양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 주로 행해진다. 그리고 '구금'은 감옥을 통해 주로 작동한다. 그러나 구금의 효과와 처벌과 예방의 측면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율이 증가하고 재범률이 줄지 않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근래 우리나라의 수형 시설이 수형자로 차고 넘친다는 소식이 들린다.

사실 그중 중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한다. 논문의 저자는

'구금'이 범죄를 배우는 '범죄의 사회화'가 아니라 죄수의 재사회화에 제대로 기여하게 하려면, 핀란드와 같은 개방형 감옥, 즉 범죄자를 '밀폐된 시설'에 격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구금 과정과 그 이후에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핀란드의 감옥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를 행하지 않을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범죄자를 오래 구금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즉 범죄자를 구금한다고 해서 범죄가 구금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범죄를 학습하는 공간이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핀란드의 사회 구성원들은 핀란드식 구금 방식 즉, '열린 감옥' 형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논문 저자는 처벌을 집행하는 기관과 죄수의 사회 복귀를 추진하는 담당 기관이 분리되어 각 분야에 집중한다면 우리나와 같은 현 구금 방식으로 달성이 어려웠던 죄수의 재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핀란드의 열린 감옥이 절대적 대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우리의 '구금' 현실을 살펴보고 보완하는 좋은 계기로 삼을 만하다.

社說

전남 관광 열풍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최근 수년 동안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와 순천만 국가정원, 광역 순환 버스 '남도한 바퀴'에 이어 신안 천사대교 등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가 대폭 보강되면서 '전남 관광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은 5079만 명으로, 첫 5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이는 경기(7643만 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전남 관광객이 지난 2014년 3196만 명에서 이듬해 3968만 명, 2016년엔 4278만 명으로 연평균 10% 이상 늘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는 동부권인 여수·순천이 관광 도시로 급성장한 영향이 크다. 여수에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300만 명 이상이 몰렸다. 여수 밤바다와 해상케이블카, 낭만 포차 등이 어우러져 이룬 성과다. 순천도 2017년 906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

고 '순천 방문의 해'인 올해는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부권에 비해 위축됐던 서남권도 인프라가 속속 확충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안 압해도와 압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는 개통 이후 하루 평균 1만 대가 넘는 차량이 오가면서 인근 식당 등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오는 10월 해상케이블카가 개통할 예정인 목포시도 '미도락(味島樂) 프로젝트'로 올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남은 전체 관광객의 절반 가까이 동부권에 몰릴 만큼 지역 편중이 심하다. 서남권과 중부권은 자원은 풍부하진 데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광객 수에 비해 저조한 소비 지출도 문제다. 전남도와 시군은 최근의 관광객 유입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권역별 숙박·쇼핑 인프라를 균형 있게 보강하고 마케팅 전략도 촘촘하게 세우야 할 것이다.

국민 우롱도 유분수지 5·18 망언 경징계라니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5·18 망언 당사자들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경징계로 마무리한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5·18진상구명대국민공청회란 자리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칭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했다. 김진태 의원은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이들은 이후에도 북한군 개입 문제를 다시 꺼내고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등 궤변을 되풀이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국당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 달 가까이 질질 끌여왔다. 그러다 마지못해 내놓은 게 이런 무늬뿐인 징계다. '징계'가 아니라 '격려'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당은 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전후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결국 이들 '세

월호 망언자'에 대한 처분도 시간만 끌다 요식 행위로 끝낼 심사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자 당장 5월 단체들이 송방망이 징계를 내린 한국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은 망언을 한 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퇴출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자유한국당은 하나하나 징계를 들고 나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망언 이후 국민적 저항이 거세져 납작 앞드리더니 결국은 '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 의원 역시 논평을 통해 "오히려 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송방망이 징계로 한국당은 스스로 군부 독재 세력의 후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제는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어떻게 해서든 망언 의원들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요즘 국회 인사 청문회를 보노라면 옛 중국 전국 시대의 대장군 한신(韓信)이 떠오른다. 한신은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운 풍운아지만 젊었을 때 워낙 가난해 밥을 빌어먹을 정도였고 어머니가 죽었을 때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다.

그는 항상 칼을 차고 다녔는데, 이 칼이 시비를 불렀다. 한신이 고향 회음의 시장 거리를 지날 때 불량배 한 명이 시비를 걸었다. "넌 늘 칼을 차고 다니지만 사실은 겁쟁이다. 너에게 사람을 죽일 용기가 있다면 그 칼로 나

의미도 없다. 그래서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아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 유명한 '과하지육(袴下之辱)'의 유래다.

청문회장에 선 고위 공무원 후보들의 별개진 얼굴에 한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그들이 온 국민 앞에서 거짓이 겹쳐 내고 있는 '굴욕'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부터 시작해 위장 전입, 주식 투자, 병역 기피, 탈세 등 온갖 의혹을

그집어내는 국회의원들에게 '죄송하기가 있다면 그 칼로 나다' '관행이었다' '계시를 되돌아보는' '제가 됐다' '장관이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여주는 후보들의 모습이 참 처량하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 모욕을 참아 내게 하는 것일까. '네 죄를 내가 알렸다'는 말처럼 자신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후보들이 '그럼에도' 청문회장에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큰 자리, 큰 권세를 바랐을 뿐 한신처럼 '큰 뜻을 품어서'는 아닐 것이라는 게 국민의 판단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굴욕을 참는 이유

기고



정범중 소설가

정권이 국민을 내버리면, 국민이 정권을 내버린다. 이것으로 이 땅의 제1 공화국과 4월 혁명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제1 공화국은 어떻게 국민을 내버렸는가? 하나의 예를 들겠다. 1954년에 헌법 개정안 국회 상정 때 정권은 사사오입(四捨五入)이란 걸 내세웠다. 국회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 아닌 135명이라고 했다. 그들은 0.333명을 버리면서 한 명도 채 안 되는 걸 버렸으니 별것 아니라고 떠들었다. 과연 그런가? 1954년 당시 남한의 인구가 대략 2000만이었으니까 헌법 개정안 투표에 참석한 국회의원 203명은 각각 국민 9만 8522명을 대표하며 이 경우 국회의원 0.333...명은 국민 3만 2837명에 해당한다. 당시 정

광주 4월 혁명은 젊은이의 금지

권은 독재자의 정권 연장에 쓰일 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 3만 2837명을 내버린 것이다. 이렇게 국민을 내버린 정권은 당연히 국민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그게 말했다시피 4월 혁명이다.

국민이 직접 나선 4월 혁명에 있어서 광주는 제 역할을 다했다. 1960년 4월 19일 오전에 학교 정문을 열고 거리로 뛰쳐나온 광주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광주의 4월 혁명은 시작됐다. 이날 광주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다. 저녁에 이르러 학생과 시민은 광주경찰서로 몰려가고 이때 경찰은 시민에게 발포한다. 이후 시위는 독재자의 퇴진 때까지 계속된다.

4월 혁명의 일익을 광주가 담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광주만의 특징을 찾고 싶어진다.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나는 지난 세기의 90년대에 '호남 4·19 30년사(湖南 四一九 三十年史)'의 편집장으로서 책을 집필했는데 당시 광주만의 지난 4월 혁명의 특징을 찾아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은 이것이다.

'광주의 4월 혁명은 고등학생이 자발

적으로 일으킨 혁명이다.' 광주의 4월 혁명 첫 번째 특징은 그 주도 세력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이다. 이 고등학생의 주도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보인다. 물론 다른 지역도 고등학생이 대거 참여했으나 광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광주의 4월 혁명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자발성이다. 대구 2·28 학생 의거의 경우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었다. 관료들은 학생들이야망의 유세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일요일 등교라는 핑계까지 부렸고 여기에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다. 마산 3·15 의거의 경우 민주당의 선거 무효 시위가 있었고 여기에 학생들이 시민의 일부로 참여했다.

정치권에 의해 시작되고 시민이 주도한 시위에 학생들이 동참한 것이다. 광주는 1960년 4월 19일 당시 직접 가해지는 압력이나 지역 정치권의 유도가 없었다. 고등학생들이 나서야 한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나섰다. 광주 4월 혁명은 그 동력을 자신의 내부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광주의 4월 혁명이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치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인가? 억압 받은 자들의 인권 신장인가? 아니면 남북통일을 좀 더 강하게 염원하게 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나는 당시 참여자들을 다수 만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은 '금지'였다. 광주 4월 혁명에 참여한 이들은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다는 긍지를 지니게 됐다. 이런 금지는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마다 그들은 앞장섰다.

그들은 민주 투쟁에서 자신의 금지에 걸맞게 행동했을 뿐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는 않았다. 이런 익명의 광주 시민이 जु게는 광주, 넓게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키워 왔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광주의 요즘 젊은이들도 금지를 지니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 세월호 때는 노란 리본을 달았고 촛불 집회 때는 촛불을 켜다. 노란 리본은 아픔을 견뎌왔고 촛불은 아픔을 몰아냈다. 광주의 젊은이들은 자신들만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4월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4월 혁명은 젊은이의 금지이다. 1960년 4월에도 그랬고 2019년 4월에도 그렇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월 국 220-0515	문화사업 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